

제1과목: 민법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법적 작위의무는 신의칙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을 근거로 제한될 수 있다.
- ㄷ. 상계권의 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 경우 일반적인 권리남용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 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②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③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 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②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③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면한다.
- ④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라도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 ⑤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4. 민법상 사단법인 A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3인의 이사 甲, 乙, 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甲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A를 위한 특정한 행위를 제3자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정관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乙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 ④ 丙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정관에 甲, 乙, 丙 3인이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A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될 수 없다.
- ②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遺體)를 처분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이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주물·종물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주물·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양도된다.
- 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 ②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 ㄷ.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 전후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 ②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⑤ 법률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9.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을 가진다.
- ②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 ④ 대리행위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 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1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ㄴ.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 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표현대리행위는 동종의 것일 필요는 없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경개는 법정추인사유이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③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 그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될 수 없다.
- ②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하게 하여 남은 담보가 채무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③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④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13.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③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④ 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 ⑤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5. 6. 2.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2. 6. 2. 00:00부터 2025. 6. 1. 24:00 사이를 말한다.

1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
- ②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 ④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 ⑤ 법원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1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 ② 채권자가 전소(前訴)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後訴)로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을 요한다.
- ④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승인은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 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압류가 되면 소멸한다.

1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③ 외화채권에서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 환산시기는 현실 지급시가 아니라 이행기이다.
- ④ 선택채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⑤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17.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 ③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④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그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한다.

18.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②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 ③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위약벌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⑤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②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양수인은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 ④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대상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 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된다.

20.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9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계계약을 체결하면,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 ㄴ. 丁이 甲에 대하여 4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5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ㄷ. 丁이 甲에 대하여 8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7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1.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이사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②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 ③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④ 보증의 효력발생요건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⑤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연체이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22.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양 채권 모두에 관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 ②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다.
- ③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 ④ 임대차계약상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3.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인수인이다.
 -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 ③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⑤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금전채무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24.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 ②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 ③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④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 ⑤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5.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변제기 전에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채무자가 변제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이익이 일부분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1억 원의 채무 중 7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3천만 원을 변제제공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 ⑤ 변제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이자에 앞서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26. 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 여부를 2025. 1. 20.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5.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격지자간임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2025. 1. 3. 위 매도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6. 乙에게 도달한 경우, 甲의 청약은 유효하다.
- ② 乙이 2025. 1. 20.까지 회신을 하지 않으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③ 乙이 2025. 1. 18. 甲의 통지대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 ④ 乙이 2025. 1. 10. 甲에게 8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15. 도달하였다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⑤ 만약 甲의 위 우편에 ‘2025. 1. 20.까지 답이 없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乙이 회신하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27. 甲은 2025. 2. 1. 乙에게 기계를 1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乙은 계약금 1백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백만 원은 2025. 2. 10.에 지급하며, 잔금은 2025. 2. 20. 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잔금지급채무만이다.
- ②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이 지나서도 계속 발생한다.
- ③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중도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④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⑤ 매매목적물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

28. 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상태였던 경우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 ②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였고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사실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 ④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소유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29.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합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 ②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 ③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 ④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0.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ㄴ. 매매계약의 매수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매수 당사자 중 1인이 해제권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 ㄷ.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최고하였으나 해제권자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ㄹ. 해제권자의 가공으로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 ① \neg, \perp ② \perp, \sqsubset ③ $\neg, \sqsubset, \sqsupset$
④ $\perp, \sqsubset, \sqsupset$ ⑤ $\neg, \perp, \sqsubset, \sqsupset$

31. 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25. 5. 1.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2025. 4. 1.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
 ㄴ. 2025. 4. 1. X를 압류한 자
 ㄷ. 甲에 의한 해제가능성을 알면서 2025. 4. 1. 乙로부터 X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
 ㄹ.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 2025. 5. 3.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neg, \perp, \sqsubset ⑤ $\perp, \sqsubset, \sqsupset$

32. 甲은 2025. 2. 1. 乙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천만 원을 2025. 2. 15.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쇄기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가 2020. 2. 20.인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상계하려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② 甲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으로 대여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③ 乙은 2025. 2. 15.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하고 인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④ 만일 2025. 2. 10.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해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乙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⑤ 만일 대여금채권이 2025. 2. 20. 시효소멸하였더라도 乙은 2025. 2. 25.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할 수 있다.

33. 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乙에게 하자 있는 X를 증여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ㄴ. 乙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증여를 해제한 경우, 乙은 X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ㄷ. 증여에 부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4.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③ 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 ④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하여야 한다.
- 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35.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 ②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 ④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물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수인이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공동차주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관계에 있다.

36.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인도 및 Y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甲과 乙 사이에 Y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② Y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에도 甲에게 Y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면 甲을 상대로 Y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Y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⑤ 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Y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7.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임인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ㄴ.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이는 위임의 종료사유이다.
- ㄷ.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8.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②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 ③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 ④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 ⑤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을 수 없다.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계약상 급부가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이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ㄷ. 급부를 한 당사자가 그 급부의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②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 ③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중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도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

제2과목: 사회보험법

41.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42.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3.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44.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 실업급여의 지급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45.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게 2년을 한도로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④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46.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②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③ 수급자격자가 질병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14일인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④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 ⑤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7.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서 산업분류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u>산업분류</u>	<u>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u>
①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0명 이하
② 건설업	400명 이하
③ 금융 및 보험업	300명 이하
④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00명 이하
⑤ 숙박 및 음식점업	300명 이하

48.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②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④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9.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구직급여 ② 장해급여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⑤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50. 고용보험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A(35세)는 B회사를 퇴사한 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4년인 A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 ① 120일 ② 150일 ③ 180일 ④ 210일 ⑤ 240일

51.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1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
- ㄴ.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ㄷ.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ㄹ. 사업장에서 신체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ㅁ.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ㅁ ⑤ ㄴ, ㄷ, ㄹ, ㅁ

52.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 ㄴ.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ㄷ. 본인의 직계비속의 질병
- ㄹ. 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
- ㅁ.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질병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ㅁ

53. 고용보험법령상 이주비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ㄴ.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ㄷ.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② 공단의 업무 중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 ④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중증요양상태”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④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⑤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ㄷ.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ㄹ.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20세 이후에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②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은 직업재활급여에 포함된다.
- ③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 ⑤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킨 자
-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 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해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유족 간의 수급권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 ①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 ②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모
- ③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 ④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자매
- 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 및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⑤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2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는?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②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③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사람
- 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문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63.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②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④ 임의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 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64.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4분의 1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
- ③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 ④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 ⑤ 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65.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입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 ⑤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6.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③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

67.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공단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둔다.
- ④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6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다음 ()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명 및 감사 ()명을 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 ① 1 ② 2 ③ 14 ④ 20 ⑤ 60

6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 ① 비상근 근로자
-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 ③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공무원
- ④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⑤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70.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 ① 104.2 원 ② 208.4 원 ③ 354.5 원 ④ 709.0 원 ⑤ 800.0 원

71.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 ①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② 19세인 직장가입자 ③ 19세인 피부양자
- ④ 20세인 피부양자 ⑤ 20세인 지역가입자

72.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②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 ③ 지역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사용된 날
- ④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의 다음 날
- ⑤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7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 ① 간호 ② 진찰·검사 ③ 수술
- ④ 치료재료의 지급 ⑤ 장제비

74.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징수한다.
-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④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 ⑤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을, 국가가 100분의 60을 각각 부담한다.

7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ㄱ)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ㄴ)

- ① ㄱ: 45, ㄴ: 75 ② ㄱ: 45, ㄴ: 85 ③ ㄱ: 50, ㄴ: 75
- ④ ㄱ: 50, ㄴ: 85 ⑤ ㄱ: 50, ㄴ: 90

7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 소멸한다.
- ②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 ③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 ④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7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③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인 농업 법인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 ④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③ 보험료 정산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채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일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⑤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7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 ②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정한다.
- ④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8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의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 ②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할 금액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4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이를 징수한다.
- ⑤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과목: 경제학원론

81. 빵의 수요곡선은 $Q_d = 200 - P$, 공급곡선은 $Q_s = P - 2$ 이다. 정부가 빵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과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단, P 는 가격,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이다.)

- ① 100, 1 ② 100, 2 ③ 200, 1 ④ 200, 2 ⑤ 200, 3

82.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수준에 생긴 변화에 대해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낸다.
- 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소득의 증가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면 그 상품은 열등재이다.
- ㄷ. 정상재 중 수요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크면 필수재이다.
- ㄹ. 교차탄력성은 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 다른 상품의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 ㅁ.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작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83.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 = 9L^{1/3}K^{2/3}$ 이고, 노동투입량(L)과 자본투입량(K)은 각각 8과 27일 때, 자본의 한계생산(MP_K)과 평균생산(AP_K)은?

- ① 1, 3 ② 2, 4 ③ 3, 6 ④ 4, 2 ⑤ 4, 6

84. 규모의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투입요소를 일정 비율로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
- ②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 비용이 각 제품을 따로 생산하는 경우보다 낮아진다.
- ③ 투입요소를 증가시킬 때 장기한계비용이 장기평균비용보다 크다.
- ④ 투입요소를 일정 비율로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다.
- ⑤ 산출량이 증가할 때 장기평균비용은 감소한다.

85. 소비자의 최적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슬러츠키(Slutsky) 분해는 가격변화의 효과를 대체효과와 가격효과로 나눈다.
- ② 가격효과는 항상 대체효과보다 크다.
- ③ 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경우 두 재화는 완전보완재이다.
- ④ 소득효과는 재화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전반적 구매력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재화소비량의 변화이다.
- ⑤ 보상수요곡선은 가격변화로 인한 대체효과를 제거한 후 구해진 수요곡선이다.

86.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작을 경우, 기업의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평균총비용은 U자 형태이고, 생산이 증가할 때를 가정한다.)

- ① 한계비용은 항상 감소한다.
- ② 평균총비용이 감소한다.
- ③ 평균고정비용은 증가한다.
- ④ 평균가변비용은 항상 감소한다.
- ⑤ 평균고정비용은 불변이다.

87. 두 재화 X재, Y재를 통한 효용함수가 $U = X + 2Y$ 일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소득을 X재와 Y재의 소비에 지출하고 P_X , P_Y 는 각각 X재와 Y재의 가격이다.)

- ㄱ.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 ㄴ. MRS_{XY} (한계대체율)는 일정하다.
- ㄷ. 두 재화의 대체효과는 0이다.
- ㄹ.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 관계이다.
- ㅁ. $MRS_{XY} < P_X / P_Y$ 일 때 X재만 소비한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88.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재화의 일정량 구입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한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이다.
- ② 생산자잉여란 생산자가 재화의 일정량 판매로 인하여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판매할 용의가 있었던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 ③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란 가격변화 이전의 효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증감해야 하는 소득의 크기를 의미한다.
- ④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란 가격변화 이전의 효용수준에서 가격변화 이후의 효용수준으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소득의 변화이다.
- ⑤ 효용함수란 일정한 공리를 만족하는 소비자의 선호 서열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89. 독점시장에서 쿠르노(Cournot) 경쟁을 하는 두 기업의 역수요함수는 $P = 20 - q_1 - q_2$ 이다. 두 기업의 비용구조는 동일하며 고정비용은 없고 한 단위당 생산비용은 8일 때, 균형가격과 기업2의 균형생산량은? (단, P 는 가격, q_1 은 기업1의 생산량, q_2 는 기업2의 생산량이다.)

- ① 10, 2 ② 12, 2 ③ 12, 4 ④ 14, 8 ⑤ 14, 10

90. 독점과 독점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독점기업이 직면한 공급곡선은 시장공급곡선 그 자체이다.
 ② 독점시장의 균형에서 가격과 한계수입의 차이가 작을수록 독점도는 커진다.
 ③ 독점경쟁시장에서 제품의 차별화가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④ 독점기업이 가격차별을 하면 사회후생은 항상 감소한다.
 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필요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91.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Q_d = 8 - 0.25P$ 이고 공급곡선은 $Q_s = 0.5P - 4$ 라고 할 때, 균형가격(P)과 생산자잉여는? (단,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이다.)

- ① 4, 8 ② 8, 8 ③ 8, 16 ④ 16, 16 ⑤ 16, 32

92.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재화에 대해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부담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세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② 조세부담은 모두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③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나 소비자에게 더 귀착된다.
 ④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나 생산자에게 더 귀착된다.
 ⑤ 조세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똑같이 귀착된다.

93.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크다.
- ㄴ. 외부효과는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 ㄷ. 직접통제 방식은 외부효과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며 상황변화에도 신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ㄹ.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94.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니계수 값이 커질수록 더 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 ② 동일한 지니계수 값을 갖는 두 로렌츠 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
- ③ 모든 소득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 ④ 전체 구성원의 소득기준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의 40%를 벌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 ⑤ 십분위분배율 값이 커질수록 더 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95.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공급부족이 야기될 수 있다.
- ㄴ. 순수공공재는 그 특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
- ㄷ. 배제불가능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 ㄹ. 비경합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소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96. 동일한 브랜드의 가전제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두 마트(mart) E와 H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은 두 마트가 전략을 동시에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보수행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E와 H는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본 게임은 1회만 행해진다. 괄호 안의 왼쪽 값은 E의 보수, 오른쪽 값은 H의 보수를 나타낸다.)

		H	
		광고 함	광고 안 함
E	광고 함	(10, 4)	(8, 3)
	광고 안 함	(3, 8)	(6, 4)

- ①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6, 4)이다.
- ② E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 ③ H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 ④ 내쉬균형은 E와 H 둘 다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 ⑤ E와 H가 각각 우월전략을 선택할 때 내쉬균형에 도달한다.

97.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상소득이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일시소득의 경우가 항상소득보다 작다.
- ② 생애주기이론에서는 같은 금액의 가처분소득을 가지더라도,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다른 소비성향을 보인다.
- ③ 케인즈 소비이론에서 현재의 소비는 현재의 가처분소득에 주로 의존하며, 미래의 가처분소득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 ④ 케인즈 소비이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0과 1사이의 값이며,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 ⑤ 항상소득이론은 사람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98. 다음 표에 근거한 실업 관련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년	2024년
취업자 수	1,000명	1,000명
비경제활동인구	2,000명	2,100명
생산가능인구	4,000명	4,000명
총인구	6,000명	6,200명

- ① 2024년의 고용률은 2023년보다 낮다.
- ② 2024년의 실업률은 2023년보다 낮다.
- ③ 2024년의 실업률은 50%이다.
- ④ 고용률은 총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 ⑤ 2024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3년보다 높다.

99. 특정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3%, 명목이자율이 5%이고, 이자소득세율이 10%일 때, 실질이자율과 세후명목이자율은?

- ① 2%, 2% ② 2%, 4.5% ③ 3%, 7% ④ 4.5%, 1.8% ⑤ 5%, 5.5%

100.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학공장의 100억 원의 부가가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10억 원인 경우, 국내총생산은 100억 원 증가로 표시된다.
- ② 우리나라 안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계액이다.
- ③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디지털도어록이 많이 생산된다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증가한다.
- ④ 기존 주택의 거래,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주부의 가사노동,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는 제외된다.

101.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 ②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자주 은행을 찾게 되는데, 이를 구두창비용이라 한다.
- ③ 인플레이션 조세란 통화발행을 통해 정부가 수입을 얻는 것이다.
- ④ 피셔(I. Fisher)가설이 성립한다면, 채권자가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 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금, 외환에 대한 투기를 초래할 수 있다.

102. 다음 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20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0이다.)

	2021년	2022년
명목GDP	1,050	1,210
실질GDP	1,000	1,100

- ① 2022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0%이다.
- ② 2022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10이다.
- ③ 2022년의 GDP디플레이터는 2021년에 비해 5% 올랐다.
- ④ 2021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5이다.
- ⑤ 2022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은 10%보다 높다.

103. 우리나라의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동일 기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을 보일 수 있다.
- ② 소비자물가지수 측정대상 품목 수는 생산자물가지수 측정대상 품목수보다 적다.
- ③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GDP디플레이터는 기준년도에 100이다.
- ④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계가 주로 소비하는 상품군의 가격변화를 나타낸다.
- ⑤ 소비자물가지수를 구할 때 모든 상품의 가중치는 동일하다.

104. 통화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은행이 증가시킨 화폐량과 예금창조를 통해 증가한 통화량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 ② 요구불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을수록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 ③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 ④ 기업이 일용직 급여를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금창조 금액은 더 많아진다.
- ⑤ 본원통화 1억 원을 증가시킬 때, 통화승수가 4라면 통화량은 4억 원 증가한다.

105. 폐쇄경제하에서 총공급곡선(AS)의 기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일 경우, 총수요의 변화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나 생산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수직인 총공급곡선은 고전파의 이분법을 만족시킨다.
- ③ 단기에 있어 모든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총공급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 ④ 단기에 실제물가수준이 기대물가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총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
- ⑤ 케인즈는 노동시장에서의 명목임금 경직성 때문에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주장한다.

106.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먼델-플레밍 모형을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국내와 해외에서 단기적으로 고정이고, IS곡선은 우상향하고 LM곡선은 수직선을 가정한다.)

- ① 변동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소득이 감소한다.
- ② 고정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소득이 감소한다.
- ③ 변동환율제하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클 경우, IS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여 자국화폐는 평가절하되지만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 ④ 고정환율제하에서 순수출이 감소할 경우, 일정하게 주어진 환율에 대하여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 ⑤ 고정환율제하에서 통화공급이 증가할 경우, 환율은 변하지 않지만 소득은 증가한다.

107. 폐쇄경제 총수요(AD)-총공급(AS)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AD-AS 곡선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개별적인 수요-공급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 ㄴ. 통화공급이 증가할 경우, AD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 ㄷ. 정부지출이 감소할 경우, AD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 ㄹ. 투자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AD곡선의 기울기는 우상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108. 아래 폐쇄경제 완전고용을 고려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콥-더글라스 생산 함수가 $Y = K^{0.5}L^{0.5}$ 이고, 자본(K)과 노동(L)의 공급량은 각각 100으로 고정되어 있다. 초기 균형상태에서 정부가 지출을 10만큼 증가시키는 경우, 균형이자율 변화(차이)의 절댓값은? (단, Y 는 국민소득, C 는 소비, T 는 조세, I 는 투자, r 은 이자율, G 는 정부지출이다.)

○ $C = 10 + 0.8(Y - T)$ ○ $I = 8 - 2r$ ○ $G = 50$ ○ $T = 50$

- ① 3 ② 4 ③ 5 ④ 6 ⑤ 8

109. 아래 폐쇄경제 IS-LM모형에서 현 수준의 중앙은행 명목통화량(M)이 100일 때, 균형국민소득과 균형이자율은? (단, Y 는 국민소득, C 는 소비, I 는 투자, G 는 정부지출, T 는 조세, r 은 이자율, P 는 물가수준이고, 초기 경제상태는 균형이다.)

○ $C = 20 + 0.8(Y - T)$ ○ $I = 10 - 2r$ ○ $G = 50$

○ $T = 50$ ○ $\frac{M}{P} = Y - 10r$ ○ $P = 1$

- ① 50, 3 ② 100, 4 ③ 150, 5 ④ 200, 6 ⑤ 250, 8

110.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제산출량이 자연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되면, 필립스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취한다.
 ② 단기에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높이게 된다.
 ③ 단기적으로 기울기가 우하향할 경우, 합리적 기대가 성립한다 해도 이 경제에서 화폐의 중립성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④ 모두가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의 경우, 단기에 필립스 곡선은 항상 수직이다.
 ⑤ 새고전학파에 의하면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따를 경우, 정부정책이 실행될 시 이를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필립스곡선이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111. 아래 이윤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투자수준을 결정하는 신고전파 투자모형(neoclassical model of investment)하에서 기업가가 구입하고자 하는 적정 자본재(K)수준은? (단, 자본재 가격이 다른 상품가격과 함께 상승하고 물가수준은 1이라고 가정한다.)

○ 자본재의 한계생산: $MP_K = 10 - 2K$ ○ 자본재의 가격: $P_K = 20$
 ○ 실질이자율: $r = 5\%$ ○ 감가상각률: $\delta = 5\%$

① 2

② 3

③ 4

④ 5

⑤ 6

112. 아래 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소비선택(intertemporal cho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비자는 두 기간 동안만 생존하고, 현재와 미래소비는 정상재이다.)

- ㄱ. 현재소비는 현재 소득만이 아닌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의 현재가치에 의존한다.
 ㄴ. 차용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경우, 소비는 평생 동안 변 소득의 현재가치에 의존한다.
 ㄷ. 제1기 또는 제2기의 소득이 증가하면, 제1기 및 제2기 소비를 모두 증가시킨다.
 ㄹ.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가 발생하면 현재소비는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113. 아내와 남편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노동시장 근로(labor)와 가구생산(household production)에 쓸 수 있도록 각자에게 10시간씩 주어졌다. 각각의 활동에 10시간을 투입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가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가구생산	근로
남편	10만원	20만원
아내	25만원	15만원

소득(노동)-여가 선택모형을 응용하였을 때,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로축은 가구생산액(L), 세로축은 근로소득액(Y)이고, 한계대체율($MRS = |\frac{\Delta Y}{\Delta L}|$)은 체감한다.)

- ① 만약 두 사람 모두 가구생산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 1시간의 노동시장 근로를 해야 한다면, 남편이 한다.
- ② 이 가구가 근로를 통해 21만원을 벌어야 한다면, 가구의 근로시간은 남편 7시간과 아내 4시간이다.
- ③ 남편의 비교우위는 가구생산에 있다.
- ④ 두 사람이 미혼일 경우와 비교하여 결혼 후에 가구의 기회집합이 확장되는 것은 전문화와 관련이 없다.
- ⑤ 이 가구의 예산선 기울기는 굴절되지 않는다.

114. A국가는 경제활동인구가 4,00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000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상태변화는 없으며, 매 기간 동안 실직률(취업자 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과 구직률(실직자 중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4%와 16%이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취업자 수는?

- ① 3,000만 명 ② 3,100만 명 ③ 3,200만 명 ④ 3,300만 명 ⑤ 3,600만 명

115.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의 한계생산은 $MP_L = -10L + 30$ 이다. 제품가격 10, 임금 100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의 고용량은? (단, L 은 고용량이다.)

-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116.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고 모든 근로자의 생산성은 동일할 때, 아래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용주의 선호(기호)차별은 정부개입 없이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 ㄴ. 고객에 의한 선호(기호)차별은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직종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근로자집단과 고객이 차별하는 근로자집단 간 직종분리를 야기한다.
- ㄷ. 고객에 의한 선호(기호)차별은 고객으로부터 차별당하는 근로자집단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 ㄹ. 편견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통계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7. 효율성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서 높은 임금이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감소시킨다.
- ㄴ. 근로자의 비근로소득을 증가시킨다.
- ㄷ. 근로자의 이직 확률을 낮춘다.
- ㄹ. 우수한 근로자를 기업으로 끌어들이는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ㄷ, ㄹ

118. 정부는 고용하는 근로시간마다 1의 급여세(payroll tax)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아래의 조건에서 이 정책으로 인한 사중손실은? (단, L 은 근로시간, W 는 시간당임금이다.)

- 노동공급곡선: $L_s = W + 10$ ○ 노동수요곡선: $L_d = -2W + 20$

- ① $1/4$ ② $1/3$ ③ $1/2$ ④ 1 ⑤ $3/2$

119. 헤도닉 임금(hedonic wage)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로축은 부상확률, 세로축은 임금이고 근로자는 위험기피자로 가정한다.)

- 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의 등이윤곡선은 우상향한다.
- ② 이윤이 다른 A기업의 등이윤곡선이 2개 있을 때,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이윤의 크기가 크다.
- ③ 근로자의 무차별곡선 기울기는 약간 더 위험한 일로 바꾸려할 때 요구하는 유보가격과 같다.
- ④ 근로자와 기업의 매칭은 (부상확률, 임금) 조합에 따라 상호 이해가 일치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 ⑤ 완전경쟁에서 기업이 제안하는 일자리의 (부상확률, 임금) 조합은 이윤이 0인 등이윤곡선상에 있다.

120. 학력선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로축은 교육년수, 세로축은 임금이다.)

- ① 임금-학력 곡선은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인적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 ② 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로 교육에 대한 한계수익률을 알 수 있다.
- ③ 능력이 다른 사람은 상이한 임금-학력 곡선을 갖는다.
- ④ 동일한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은 할인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교육년수를 선택한다.
- ⑤ 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